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도참고자료**	(배포) 2017. 11. 29(수)
11월 30일(목) 11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
비고	* 모두말씀 별도 배포 # 공동배포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금융위원회	
담당	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	과장 이진민, 사무관 오연순 (02-6050-3291, 3292)
	국무조정실 기획과제과	과장 한동희, 사무관 지사향 (044-200-2911, 2912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	과장 양청삼, 연구관 김광의 (02-2110-2830, 2834)
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	과장 주홍민, 사무관 김원태 (02-2100-2530, 2971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	과장 김대자, 사무관 김종락 (044-203-4120, 4515)
	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	과장 정용식, 사무관 정재원 (044-201-4307, 4315)
	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	과장 정윤순, 서기관 오성일 (044-202-2420, 2402)
	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	과장 이태원, 서기관 박도순 (042-481-4555, 4599)

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,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.

- 이낙연 국무총리,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-

▸ **정보통신기술(ICT) 융합 ·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마련**
▸ **핀테크 분야 개별 규제면제,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법 제정 등**

□ **이낙연 국무총리**는 **11월 30일(목) 오전,**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**'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'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·디지털 휴먼(로봇)연구센터를 방문하고, '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'를 주재**했습니다.

○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**4차 산업혁명에 대비**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, 전문가들로부터 **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**하고 **「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」**에 대해 **논의**했습니다. (참고1)

* **(참석) ▲민간**(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소장, 문경록 ㈜뉴지스탁 대표, 송재근 유콘시스템㈜ 대표이사,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, 유태준 ㈜마인즈랩 대표이사, 윤승식 ㈜코너스 전략기획본부장, 이승건 ㈜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,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,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, 황유경 ㈜녹십자랩셀세포치료연구소장, 황태순 ㈜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**▲정부**(과기정통부 2차관, 산업부 차관, 중기부 차관,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, 국토부 항공정책실장, 금융위 사무처장)

<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방문>

□ 이 총리는 먼저, **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***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, **자율주행연구실****과 **디지털휴먼(로봇)*** 연구센터**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**참관**했습니다.

○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,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,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**직접 시승**했습니다.

* **(융기원)**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('08.3.21)된 국내최초의 관·학 연구기관으로 융합기술 연구개발,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, 산학연 공동연구 등 진행

** **(자율주행차)**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으로 고정밀 디지털 지도, 차량과 사물 간 통신기술 사용 등 첨단기술 집약분야임

*** **(휴머노이드 로봇)**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다양한 물체 감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재난에 대응한 스스로 벽 뚫기 및 밸브 돌리기 등 시연 가능

**** **(참석)**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택동, 과기정통부 2차관, 산업부 차관, 국토부 항공정책실장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30 11:19:59

<「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」 논의>

□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**「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」을 논의했습니다.**

○ 먼저,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**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「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」**을 보고 받았습니다. (참고2)

○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**9.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**에서 심의·확정한 **'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'**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·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,

-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**과 **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**을 담고 있습니다.

<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>

▪ **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(규제샌드박스)** 도입으로 **신제품·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**될 수 있도록 **규제 혁파**

① **(입법방식 전환)** 신제품·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

△ 네거티브 리스트(지금까지의 방식) → △ **포괄적 개념 정의** △ **유연한** 제품·서비스 **분류체계** 등으로 확대

⇨ **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(12월말)**

② **(혁신제도 도입) '규제샌드박스'를 도입**하여 신제품·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

△ 시범사업, 임시허가,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

⇨ **ICT융합,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 추진**

* **(ICT융합) 정보통신융합법**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
* **(핀테크)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**으로 금융규제특례 도입(~'18.6월 발의)
* **(지역특구)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개정**으로 **규제샌드박스 도입**(~'18.6월 발의)

○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**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**하고,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**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**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
□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**규제샌드박스 추진 등**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 (참고3)

○ **(과기정통부)**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**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·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**으로 도입하고자 **'정보통신융합법'을 개정***합니다.

*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

- 또한,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,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,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<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>



△ **심사기준** : 혁신성, 이용자 편익, 안정성,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제시 사항 등
△ **이용자 보호장치** : 보증보험,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
△ **후속조치** : 실증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정비 후 시장출시 가능

○ **(산업부) 융합신제품 중** 국내 허가·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, **6개월 이내(Fast-Track)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***하고,

*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**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**,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 취득 시 **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**('17.11월,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)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30 11:19:59

- 아울러,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**규제애로를 전수조사***하여, **규제 개선안**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.

* 우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,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규제애로 발굴 중

○ **(금융위)**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**비조치의견서,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**(위탁테스트, 지정대리인)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**본격 시행**하고 있습니다.

-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**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(가칭)」을 제정**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, 개별 규제면제 등 **특례를 부여**할 계획이며,

- **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**과 관련하여 **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**에 있습니다.

○ **(중기부)**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**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·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**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

-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, **실증·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** 하고,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·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입니다.

○ **(국토부)** '15년 12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 **드론 비행테스트**를 위한 **시험장소**를 **확보·운영**해 오고 있으며, 지난 11월에는 민간의 **신기술 수용, 사업화 지원**을 위해 야간·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**'드론 특별승인제*'를 도입**했습니다.

* 공공분야(수색, 구조 등)에서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한 특례(인구밀집지역·야간 제한 등) 적용

- 아울러,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**차종분류체계**를 **유연하게 개편**할 ('18년도) 계획입니다.

○ **(복지부)**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**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**하고,

- 미래 유망기술('**로봇·AI·IT·3D프린팅** 등'을 활용한 **의료기술**)은 **신속 도입**을 위해 안전성·유효성 문헌 외에 **가치성**을 **고려한 별도**의 **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**.

□ 이와 같이, 신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여건 및 특례 적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**규제샌드박스 도입** 등 **신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**할 예정입니다.

○ 또한, 중앙부처,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하여 **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하여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** 마련하기로 했으며, 아울러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앞으로도,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※ (붙임) 1.「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」행사개요
2.「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」안건(요약)
3. 부처별「신산업 규제혁파 및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」
4.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30 11:19:59

참고 1 「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」 행사개요

□ **추진개요**

○ **(일시/장소) '17. 11. 30(목), 09:30~11:20 /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**

○ **(주요내용)**

- **「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」 보고**
- **건의·자유토론**

□ **세부 진행**

① 현장방문(09:30~10:00,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E동 2층)

○ **(참석자)** 국무총리, 과기정통부 2차관, 산업부 차관, 국토부 항공정책실장,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5명 내외

○ **(진행순서)** 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 청취 → ② **자율주행연구실 방문** → ③ **디지털휴먼연구센터**(로봇) **시연·참관** → ④ **자율주행차 시승**

②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논의 (10:00~11:20, A동 16층 회의실)

○ **(참석자)** 국무총리, 기업인, 교수, 연구기관 관계자 등 **총 21명**

- **(정 부)** 관계부처 차관 등
  * 과기정통부, 산업부, 국토부, 복지부, 중기부, 금융위 6개
- **(민간인)** 기업인(7명), 교수(1명), 연구기관 관계자(3명) 등 **11명**

참고 2 「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」 안건(요약)

1. 세계경제 현황과 신산업 대응 현황

◇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**세계경제 축이 디지털 산업으로 변화**되고 있으나 **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응이 미흡**한 상황

1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변화

○ **4차 산업혁명** 전개 → **세계경제 축이 정보통신(ICT)중심**으로 변화

-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에 **ICT 기업*이 모두 차지**
  * 1위 애플, 2위 알파벳(구글), 3위 MS, 4위 아마존, 5위 페이스북

○ **세계 213개 유니콘기업** 중 미국(107개사), 중국(56개사) 기업 차지 ('17.9월 기준)

- 최근 우리는 최근 **3년째 대형 스타트업 배출이 부재**
  * 한국의 유니콘기업은 2개사(쿠팡, 옐로모바일)

※ 유니콘기업 : 기업가치 10억불 이상이며, 설립된 지 10년 이내 스타트업

2 우리의 현주소

○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**대응수준이 선진국**에 비해 **미흡***

* **제조업** 4차 산업혁명 선진국과 **4년 격차**(2017.5월, 산업연구원)
* 4차 산업혁명 **적응 준비순위**(UBS, '16년) : 45개국 중 25위
  - 1위(스위스), 5위(미국), 12위(일본), 25위(한국), 28위(중국)

○ **주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***와 **인프라 부족**을 지적

* **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(22.3%)** > 전문 인력 및 인재부족 (18.6%) >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(18.6%) 순 (현대경제연구원 조사, '17.5월)
* **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사업모델**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**40.9%**(투자액 기준)**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**(아산나눔재단, '17.7월)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30 11:19:59

2.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

◇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,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, 창업·벤처기업 규제혁파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

<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(9.7) >



3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

1. 개 념

□ **(입법방식 전환) 신제품·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**를 위해 **다양한 방법**으로 **법령 개정***

* △네거티브 리스트(지금까지의 방식) → △**포괄적 개념** 정의 △**유연한** 제품·서비스 **분류체계** 등으로 확대

□ **(혁신제도 도입) '규제샌드박스'**를 도입하여 신제품·신서비스의 **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** 신산업 시도가 용이*하도록 허용

* **시범사업, 임시허가,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**하고 **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**

<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추진체계 >



2. 추진 상황

(1) 입법방식 전환

□ **현재 입법방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·검토 중**

○ **(네거티브 리스트)** 금지 사항을 열거, **나머지 사항은 원칙 허용**

○ **(포괄적 개념 정의)** 기존 법령에 한정적·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**사업요건 및 기준 등을 포괄적인 개념 정의로 전환**

○ **(유연한 제품·서비스 분류체계)** 현행 기술수준을 전제로 한 제품 유형분류를 **기타유형도 포괄**할 수 있게 **분류체계 유연화**

□ 이와 별도로 **신산업·신기술 규제혁파 과제**를 발굴·검토 중

(2) 혁신제도 도입

□ **규제샌드박스** 도입을 위해 **국내외 사례 조사, 가이드라인 배포, 관계부처 협의** 등 **도입 우선분야 발굴**

○ ICT융합, 핀테크, 산업융합 분야 등에 **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** 검토 및 **개별법령 개정 추진 협의**

※ 국내외 규제샌드박스 기 도입 사례

□(해 외) 영국 핀테크 산업
- 금융규제 당국은 **혁신적인 금융 사업을 선정**하여 **사전 테스트시에 기존 규제를 유예(또는 면제)**하고 **사후평가로 정식인가 결정**

□(국 내) 드론 산업
- **7개 시업공역**에서 **일부 비행 규제를 면제**하여 **성능테스트를 허용**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30 11:19:59

3. 향후 계획

□ **(입법방식 전환)** 발굴된 과제는 **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** 등을 거쳐 **조정 및 확정(12월 말)**

□ **(혁신제도 도입)**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**규제샌드박스 입법화**

○ **(ICT융합)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중*** → ICT 융합 기술·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 및 규제 탄력 적용 허용 근거 마련

*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

○ **(핀테크)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,** 금융규제 테스트 시행 등 금융 규제특례 도입(~'18.6월 발의)

* 현재 금융규제특례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(~'17.12)

○ **(지역특구)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 준비중** → 지역특구를 활용한 **규제샌드박스 도입**(~'18.6월 발의)

참고 3 **부처별「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」**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□ **현황**

○ 지금까지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**IoT, 클라우드, 빅데이터** 등 新기술·서비스 **분야별 규제혁파**를 중점 추진*

* ('16년) IoT, 클라우드, 빅데이터 등 53건 ('17년) 인공지능(AI), 가상현실, 핀테크 등 17건

○ 현재, **新산업·서비스 출시 지원**을 위한 **혁신제도 도입** 및 **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**을 위한 **법제도 정비**를 선제적으로 추진 중

□ **추진내용**

○ **(혁신제도 정비)** 현행 **임시허가 제도**를 개선(1년→2년, 기한내 법제도 정비)하고, **혁신적인 서비스**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**제한된 조건**하에서 실증해 볼 수 있는 **규제샌드박스 도입**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<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절차 >



△ **심사기준** : 혁신성, 이용자 편익, 안정성, 검증 필요성 및 관계기관 제시 사항 등
△ **이용자 보호장치** : 보증보험, 안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
△ **후속조치** : 실증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정비 후 시장출시 가능

○ **(낡은제도·관행 혁파) 전자문서의 효력**을 명확히 하도록 **전자문서법**을 **개정***하여 **종이문서 위주의 업무관행을 혁파**

* 법부무와 공동으로 전자문서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(11.21), 연내 국회 제출 예정

- **민간분야 액티브X 제거**,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

□ **향후 계획**

○ **정보통신융합법** 입법 지원 및 **적용 대상사업 발굴**('18.1월~)

○ **ICT 신기술·신산업 분야 규제혁파** 추진('18.1월~)

※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중('17.10~'18.2, 행정연구원)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30 11:19:59

금융위원회

□ 신산업 · 신기술 규제혁파 추진

○ **(혁신적 금융서비스)** 블록체인* 기술을 활용한 **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인인증서 불편 해소** → 금투업권 블록체인 **공동 인증서비스 오픈(10.31)**

* 거래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상 여러 컴퓨터에 분산·저장하는 기술

○ **(인터넷전문은행)** 금융·ICT 융합의 상징, 「24시간 365일 손 안의 은행」 인터넷전문은행 **본격 영업개시** (케이뱅크 '17.4.3, 카카오뱅크 '17.7.27)

○ **(크라우드펀딩 확대)**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**투자한도·전매제한 등 관련 규제 혁파**('17.10.31)

○ **(클라우드 활성화)** 개인신용정보 등 **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**에 대해서는 **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토록 허용**('16.10.)

○ **(로보어드바이저 도입)** **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**(RA)는 **투자자문 ·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** 허용('17.5.8)

- 지점방문 없이 **온라인**에서 **비대면 투자자문계약 체결 허용**('16.5.2.)

□ 규제샌드박스 추진

○ **(1단계)** 규제부담 없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**법을 개정하지 않고도** 가능한 방안부터 **우선 시행**

-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**비조치의견서 발급**
- **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제휴**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기술·아이디어를 테스트(위탁테스트, 지정대리인)

○ **(2단계)** 현행 법령 내에서 테스트가 불가능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**시범인가,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**를 적용('18년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정)

산업통상자원부

□ 현황

○ AI, 빅데이터, IoT 등 **혁신기술 기반**의 **융복합 가속화** → 새로운 융합 신제품에 맞는 **인증·허가 기준 부재**

○ 기존 법·제도를 뛰어넘는 **新제품·비지니스 모델**이 빠르게 창출 → **산업현장 규제애로** 적극 해소 필요

□ 주요내용

○ **(인증·표준) 적합성인증제도*** 활성화를 통한 융합 신제품·서비스의 시장출시 촉진

* 융합신제품 중 국내 **허가·인증 기준이 없어**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, 6개월 이내(Fast-Track)에 **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제도**

-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**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**,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**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**('17.11월~)

○ **(산업현장 애로 해소)** 네거티브 리스트, 포괄적 개념정의 등 **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발굴**(~'17.下),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**규제애로를 전수조사*** 추진

* 우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, 현장방문 등 현장 규제애로 발굴 중

□ 향후계획

○ 기업을 대상으로 **적합성인증 설명회, 포럼**을 개최하여 **제도홍보 강화 및 제도 활성화 추진**

○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규제 및 현장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('12월~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30 11:19:59

국토교통부

□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

○ **(드론) 사업범위 네거티브** 전환, 자본금요건 완화 등 **창업활성화** 기반 마련 및 비행승인 면제확대(12→25kg), 장기허가제 도입(1→6개월) 등 **여건 개선**('16.7)

○ **(자율주행차) 임시운행허가 제도 도입**('16.2), 시험운행구역 **네거티브 전환**을 통한 **전국확대**('16.11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제외) 추진

- 無핸들·無페달 등 **다양한 자율주행차 허용**을 위한 특례 마련 및 **필수 탑승인원 축소**(2인→1인)를 통해 **임시운행허가 활성화**
- 자율주행차 운행허가 전 **안전성 검토** 시 **동일차종·동일시스템** 차량의 경우 **선별검사**를 시행하는 등 **검증절차 간소화**('17.12)

○ **(교통 o2o) 심야시간**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**면허체계 개선***을 통한 **콜버스 운행 허용**('16) 및 **카셰어링 활성화** 추진

* (이전) 심야시간 면허규정 없음 : 불법논란 → (개선) 심야시간 면허체계 신설

○ **(자동차분류 네거티브전환)**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출시에 대비 **자동차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개편**(연구용역중, '18년까지 방안 마련)

□ 규제샌드박스 추진

○ **(드론 시범사업)** 유망 드론 업체(58개)의 **비행테스트 지원**을 위해 **전용 시험장소***를 확보하고 신규 활용분야** **시범운영·실증** 추진 중('15.12~)

* 강원 영월군, 전남 고흥군, 경남 고성군, 충북 보은군, 대구시, 부산시 등 총 7개 지역

** 물품수송, 산림보호·재해감시, 시설물진단, 국토조사·순찰, 통신망활용 등

○ **(드론 특별승인제)** 민간의 **신기술·비즈니스모델**의 **사업화 지원**을 위해 **사례별로** 안전기준 검토 및 **야간·가시권밖 비행**을 허용하는 승인제 도입

○ **(적용특례 도입) 공공분야**에도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해 인구밀집 지역·야간 제한 등 항공법령 **특례**(자체규정 필요) **적용**('17.11)

* ①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(搜索)·구조 ②응급환자 장기(臟器) 이송 등 구조·구급 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(防除)·순찰 등

보건복지부

□ 현황

○ 의약품·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·제품화 → 치료 활용 **각 단계별 진흥책 추진 중**

○ 이와 함께, 보건의료 산업·기술이 **국민 생명·건강에 직접 미치는 영향**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등은 규제 혁파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 중

* **사회적 비용 및 파급효과가 크고, 안전성·윤리** 등을 종합고려 필요

□ 추진내용

○ **(연구 단계) 생명윤리 관련 규제 혁파**

- **(배아줄기세포연구)** 현재 20개 희귀·난치질환으로 **질환 범위가** 제한되어 있으나, **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범위 확대** 검토
- **(유전자치료)** 유전질환·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, **선진국과 같이 질환 허용범위 확대 방안** 검토

* (개선) **질환 제한없이**,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

○ **(현장 활용 단계)** 미래 유망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방법 개선

- **미래 유망기술**('로봇·AI·IT·3D프린팅 등'을 활용한 **의료기술**)**의 신속 도입**을 위해 **가치성**을 반영한 **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구축** 검토

* (미래 유망기술) 안전성·유효성 문헌 외에 **가치성도 검토하여 신속한 시장진입** 지원

-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도입된 미래 유망기술은 **3~5년 간 임상현장에서 사용**하며 **쌓은 근거**를 바탕으로 **안전성·유효성 재평가**

□ 향후 계획

○ **(연구) 생명윤리 민관협의체**를 통해 배아줄기·유전자가위 관련 사회적 논의

○ **(현장 활용)** 미래 유망기술 가치 반영 평가방안 연구, 관련 평가체계 마련(~'18.상)

- 가치 반영 평가 시범사업 수행('18.하), 본 사업 실시('19)

try of Trade, 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30 11:19:59

중소벤처기업부

□ **벤처투자 규제혁파 추진** (「벤처투자촉진법」 제정, '18.6)

○ **벤처투자 관련 체계·제도 일원화**

- 유사한 성격의 **창업투자조합**(창업법)과 **벤처투자조합**(벤처법)을 **벤처투자조합**으로 **일원화**하여 **통일된 규정을 적용**

* 최소설립자본금 : (현행) 창투조합 20억원, 벤처투자조합 30억원 → (개선) 벤처투자조합 20억원

○ 보다 자유로운 **진입·투자**를 위한 **벤처투자시장 규제혁파**

- 창투사 설립을 위한 **자본금,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**하고* **창투사 투자대상 확대 및 의무투자비중 차등화****

* (자본금) 50억원 → 20억원, (전문인력) 자격증, 학위 소지자 → 창업·투자 경험

** 일부 사행성 업종 등만 제외한 全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일률적인 의무투자 비중(40%)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

□ **규제샌드박스 추진** (「지역특구 규제특례법」 개정안 발의, '18.6)

○ **지자체(민간사업자)가**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**신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, 당해 신기술 등을 실증·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**

- **그레이존 해소, 실증·사업화 규제특례제도**를 도입하고, **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** 추진

-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구운영 컨설팅 등 **행·재정적 지원제도 도입**

※ 현재 전문가 등 **의견수렴 중**이며, **연구용역을 거쳐 법안발의 예정**('18.6)

참고 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황

□ **설립개요**

◇ 차세대 성장 엔진의 핵심인 융합기술개발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**서울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내 최초, 최대 규모의 융합기술전문연구기관**

○ 설립일 : 2008. 3. 21.

○ 설립배경 : ① 융합기술 연구개발 ② 산학연 공동연구 및 창업기업 지원 ③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④ 지역공헌사업

○ 조직 : 3개 본부, 4개 연구소 (나노, 바이오, 스마트시스템,범학문통합연구소)

○ 직원현황 : 134명 (겸임교수 및 연구과제 참여인력 포함)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**주요 사업**

○ **융합기술 연구개발**

- 융합기술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융합기술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연구 수행

- 20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융합기술 연구개발 강화

*** 2017년 대표 연구분야**

-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
- 1인승 SPM, 자율주행차 개발에 이어 자율주행셔틀 개발
- 차세대 의료기술·서비스 개발을 위한 바이오융합기술 연구
- 한국형 암 정복 위한 혁신적 치료법 신기술 선도
- 암 세포 전이물질 세계 최초 규명
- 세계 최초 전자파 차단 스마트 콘텍트렌즈 개발
- 세계 최초 인공 뇌 구조 모사 3D 구조체 합성 성공 등

*** 2018년 연구방향**

- 4차 산업혁명 대응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융합기술연구개발 수행
- 분야 : 지능형 헬스케어, 차세대 교통시스템, 미래형 도시설계 분야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30 11:19:59

○ **연구성과 확산사업**

- 기업과의 공동연구, 혁신기업 기술창업, 기술이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
- 기술교류회, 포럼,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한 산학연 기술교류지원
- 융합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양성 및 융합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(대학생 인턴프로그램, 융합문화콘서트)

○ **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**

- 경기도내 대학(원)생의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발굴, 성공창업을 돕는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

※참고자료: 연구성과 관련사진

1. 자율주행 기술 (1인승 SPM, 자율주행차, 자율주행셔틀)



2.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실증단지

